

石油政策 有感 (其 1)

俞石在

최 근 「가스유통구조 현대화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당초에는 「충전소대형화계획」인가 라고 이름붙여졌던 것이 언제인지 유통구조현대화계획이라는 보다 거창한 제목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가스유통구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容器로 가정에 배달되는 프로판의 공급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가스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급시설을 대형화·고도화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예비용기를 비치하고 미터기를 부착하여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가스가 떨어졌을 때, 새로운 용기가 배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발표됨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모 재벌그룹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저의 하나인 BP와 손을 잡고 가스유통업계에 참여할 것을 선언, 관계당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유업계는 정유업계를 제쳐두고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더우기 유통부문에 메이저를 끌어들이는 것은 유통질서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통업계는 유통업계대로 기존업체를 도산시키며, 대기업이 유통업체마저 지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공식적인 표현은 이 정도로 그쳤지만, 우리 나라 굴지의 재벌그룹이 평소에 석유사업 참여를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다는 점에서 그 壯大한(?) 포부의 편린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라는 위기의식이 근처에 깔려 있을

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정부는 유통업계, 정유회사 및 여타 희망업체에 대형충전소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충전소 현대화 계획이 발표되고 얼마 안있어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고,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1차 행정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시정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낡은 파이프를 갈고 제 깊이대로 다시 묻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모양이다.

어느 일간지는 「땅속 지하爆彈」이라는 題下의 사설에서 「지난 겨울에 가스폭발사고가 6백여건」 「새해 한 달만 사이에 2백46건의 폭발사고가 잇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시공상의 불성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필연적으로 기존 충전소가 각 가정에 배달하는 프로판용기가 과연 어느 정도 위험한가하는 점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 관계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기 자체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도시가스 배관이 허술하다던가 소비자의 취급부주의가 가스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가스 배관은 마땅히 안전한 파이프를 갈아야 할 것이며, 이음을 튼튼히 한다던가, 보호막을 씌워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배달용기의 안

전성을 제고한다고 하여도 해로운 것이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가스가 떨어질 때, 20~30분씩 기다리는 불편조차도 예비용기·비치로 없애주며, 미터기를 설치하여 양을 속이는 일을 막도록 해주겠다는 錦上添花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가스공급상의 안전성을 높이고 정량을 맞추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그 어느곳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인가?

현행제도상 가스안전공사라는 공기관이 있어서 가스안전점검에 관한 제반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하며, 시·도와 합동으로 시정조치를 한다. 또한 용기에 정량의 가스가 들어있는지의 여부도 체크한다. 한마디로 가스의 안전 및 기술에 관한 모든 것을 시행·감독하는 전담기구인 셈이다.

아마도 정부는 가스안전공사로서는 이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을 알 길은 없으나, 가스안전공사의 기구가 너무 작든지, 인원이 모자라든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검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하튼 정부는 충전소 자체를 대형화하고 충전소내에 검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처럼 보인다.

현 시스템하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업체와 더불어 가스안전공사, 나아가서는 그 감독관청마저 하나로 묶여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검사 자체가 공급업자의 책임이므로 공급업자는 스스로 안전관리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만일 사고가 났다고 하여도 행정관청은 1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여하튼 검사만 철저히 되면 될 것이 아닌가. 기존검사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각 업체별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쉬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매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습관에 중독된 자들의 비뚤어진 의견에 불과할 것이며, 정책의 장기적인 심오한 깊이를 付度하지 못한 所以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視角이 일부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추진하는 방법상의 문제점을 거론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용기안전관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충전소 시설기준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현행 충전소는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고 합동으로 시설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던지 시설을 개체시키든지 하면 될 것이다. 기존업자에 우선권을 주려면 경과기간내에 시설개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포기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될 것이고…….

제3자가 충전소를 세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고 기타 요건에 부합되면 허가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정유회사와의 공급계약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정량공급 시비도 그렇다. 현재 이에 대한 검사·감독기관이 버젓이 있는 이상 그 기능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자기돈으로 미터기를 부착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예비용기라는 것도 용기대체기간을 조정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이다. 즉, 계획배달제 하에서 용기를 두개 비치하고 1개월에 한번씩 순회대체한다고 하면 현행과 같이 용기를 한개만 놓고 15일에 한번씩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가정에 용기를 두개씩 놓는다고 해도 대체기간에 따라 현재와 같은 불편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재고부담내지 용기부담만 추가로 발생할 뿐이다. 거기에 자동개폐밸브값 등을 고려하면, 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일부에서는 사용상의 부주의에서건 무슨 이유에서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와 같이 용기 한 개를 놓는 경우보다 두개를 비치할 경우에 사고의 범위는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현재로서는 3·14조치로 정유사가 직접 충전소나 주유소를 설립할 수단은 배제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 경우에만 「此限에 不在」한다고 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 3·14조치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심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정유회사는 손발이 묶여 있고 유통업체는 영세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기백역원이 소요되는 충전소를 설립하기에는 추진력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름든 귀추가 주목될 뿐이다. *